

2007년 대선, 진보·개혁 진영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¹⁾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I. 잘못된 정책과 실패한 정치
- II. 새로운 문제들, 낡은 문제들 그리고 모호한 균열선
- III. 어떤 가치·정책으로,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것인가
- IV. 운동정치, 제도정치 그리고 싱크 탱크

I. 잘못된 정책과 실패한 정치

- 2007년 대선에서 여권의 정동영 후보는 유효투표수 중 26.14%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정책집행과 정국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부정적 평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지표 전반에 대해, 정부의 개별 정책에 대해, 정권 및 여당의 국면에 따른 정국운영, 대통령 및 집권집단의 정치적 행동, 여권의 재편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경제지표에서는 국민소득 관련 지표들의 전반적인 저하와 대외의존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항목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	6.1	9.2	4.7	-6.9	9.5	8.5	3.8	7	3.1	4.7	4.2	5
국내총소득 (%)	6.3	9.6	2.9	-7.2	8.9	4.7	2.6	6.7	1.9	3.8	1.1	2.1
국민총소득 (%)	6.3	9.5	2.7	-8.3	9.4	5.5	2.8	7	1.9	3.9	0.7	2.3
최종소비지출 (실질증감률, %)	5.9	9	3.2	-10.6	9.7	7.1	4.9	7.6	-0.3	0.4	3.9	4.5
수출입의 대GNI 비율(명목, %)	54	61	68	84	75	82	77	72	76	86	85	89

1) 이 글은 성균관대학교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민/윤/연 포럼>(2008. 1. 4)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임; 필자는 개인적으로 논평을 해준 임원혁 박사에게 감사를 드림

-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총 득표율은 35.0%(이인제 포함 35.7%)이며, 보수진영의 총 득표율은 63.8%(허경영, 전관 제외)이다.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낮은 득표율은 진보·개혁 진영 전반의 정치적 실패를 의미한다.
 -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음
 - 정통 진보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3.90% → 3.01%),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내건 문국현 후보의 득표율(5.82%)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투표율은 63.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낮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한국 민주주의가 잠재적 위기 상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10 년 간 투표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며, 민주주의가 복원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자체와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의무, 정당과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 사회/공동체와 타인/주변에 대한 관심 등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줌
 - 여러 복잡한 논의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추론하면, 투표의 정치적 효능이 높을수록 투표참가율이 높을 것이므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투표의 효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함
 - ※ ‘지역주의’ 에 의한 규정성 때문에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 투표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에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투표율이 더 낮았음(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제외)

선거 유형	투표율 (%)	
12대 국회의원총선거(1985.2)		84.6
13대 대통령선거(1987.12)	89.2	
13대 국회의원총선거(1988.4)		75.8
14대 국회의원총선거(1992.3)		71.9
14대 대통령선거(1992.12)	81.9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6)		68.4
15대 국회의원총선거(1996.4)		63.9
15대 대통령선거(1997.12)	80.7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6)		52.7
16대 국회의원총선거(2000.4)		57.2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		48.9
16대 대통령선거(2002.12)	70.8	
17대 국회의원선거(2004.4)		60.6
17대 대통령선거(2007.12)	63.0	

□ 정동영 후보의 패배,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의 퇴조는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 및 정치 실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정치 실패를 보여준다. 그동안 정치권의 비민주성 및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지만, 이제는 정치적·이념적 신뢰 상실, 국정운영능력 및 정치력에 대한 불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실패는 이중적(진영 차원, 사회 차원)임
-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은 진보·개혁 진영에 비해 ‘정치적 동원’ 또는 ‘정치적 기대 제고’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경북 임(평균투표율과 지역투표율의 비교, 16대와 17대 대선투표율의 비교 등)²⁾
- 하지만 이 현상에 지나치게 주목할 경우, 투표하지 않은/않는 사람들의 성향과 전반적인 투표율 저하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정상호(“‘새로운 중심’의 건설: 강령·리더십·정당의 창조적 전환”,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발표문)는 대선 패배의 일차적 원인을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적 지체 현상’에서 찾으면서, 정치적 지체의 핵심 현상으로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정당·리더십의 허약성’, ‘목전의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처는 중장기 전망과 정책으로 미루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 의제에 당정이 집중하는 양상의 반복’을 들고 있음; 이러한 비판은 진보·개혁 진영 시민·사회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달리 표현하면, ‘정치 과잉’으로 인한 ‘정치 실패’, ‘정책 실패’

□ 몇 가지 추가적 언급

- 진보·개혁 진영의 관점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정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35.0%에 달하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의 진보·개혁 진영도 정치공학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당연히 후보단일화라는 정치공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후보단일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주화세력의 사회의식도 존재함
- 보수 진영의 득표율이 거의 2/3 정도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한국 사회가 보수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실질적으로 상당수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를 중도적이며 개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상당히 중도·개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를 단순히 ‘허위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없음; 시대상황에 따라 중도·개혁, 나아가 진보의 가치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다양한 여론주도층의 과제임³⁾

2) 진영별 ‘정치적 동원’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더 세부적 분석을 필요로 함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를 참조할 것.

II. 새로운 문제들, 낡은 문제들 그리고 모호한 균열선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와 사회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 (강명세, “60-40의 정치로의 회귀”,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발표문)
-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및 국민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변화에 덧붙여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직·간접적 영향력 증대는 한국 경제의 ‘하부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음
 - 지난 10년 간 한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경제개혁 심화와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주의가 지속되고(토건국가화 심화) 노동시장은 유연화·분절화 되었음
 - 재산효과(부동산 및 동산)에 따른 부·소득 불평등 심화, 산업별·업종별·직종별·고용형태별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수입의 불안정 심화 등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현상임
- 현재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전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노동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 의존도의 상승,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고착, 농촌·농업 문제 지속·심화 등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쉽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게 만들
 - 전통적인 토건국가전략에 덧붙여, 새로운 형태의 국토개발전략이라고 할 금융·상업·관광 중심의 ‘두바이식 성장 전략’ (홍종학)이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판단됨⁴⁾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성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양극화는 성장과 함께 심화될 것이다.
- 양극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인 계급·계층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현상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축적체제 변화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는 과거(의 이중구조)와 달리 경제성장(생산력 증대, 무역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 함께 해소되지 않고 심화될 것임(홍장표)
 - 더 거칠게 말하면 양극화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4) 실제로 지난 10년 간 서비스업과 금융업이 경쟁력 제고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 있음

-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는 민족문제(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민족문제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적 균열은 민족문제와 사회문제이며, 그동안 한국 정치 지형은 ‘민족문제 편향’이 있었음(강명세)
 -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포용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 차원에서 민족문제의 영향력은 상당히 낮아졌음
 -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대북포용정책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은 높아졌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정책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지역주의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적, 정서적(사회심리적),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한국 정치에 ‘내면화’ 되었으며,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한국 민주주의에서 지역주의는 일종의 ‘원죄’에 해당함; 원죄는 결코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종종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지역주의적 경향’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개혁 진영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나타났음
 -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역주의에 넘겨쫓거나 지역주의를 단기간에 해결해야만 한다는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새로운 문제들과 낡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정치적 균열구조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지만, 진보·개혁 진영의 성공은 균열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드러내는 것에 달려있다.
 - 민족문제 편향적인 균열구조가 2002년 대선에서는 지배적이었다면, 1997년과 2007년 대선에서는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민족문제와 지역주의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두 문제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Ⅲ. 어떤 가치·정책으로,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것인가

- 경제·사회·정치·외교·문화 차원에서 변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 가치에 기초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내어놓을 때, 진보·개혁 진영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 진보·개혁 진영은 그동안 ‘문제들’ 자체를 지적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으나, 대북정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 분석과 정책대안을 내어놓는 데에서는 한계를 보여 왔음; 그렇

다고 보수진영이 적절한 대안을 내어놓았는지는 의문임

- 현 단계에서 핵심적인 변화 또는 변화 요인: 양극화 경향의 고착화,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변화(미국패권의 약화, 중국의 부상),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중국 경제의 성장 심화와 불안정 가능성
 -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올바른 분석과 적절한 정책대안이 필요함; 모든 정책은 목표·의도와 성과·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정책의 성과·결과가 정권과 진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됨
 -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거의 6 배에 도달했음(2000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000 달러에서 18,000 달러로); 197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영향력으로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었음: 정치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사회의식,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조기 유학, 성·결혼 등에 대한 의식 변화; 사회·경제적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음
 - 미래지향적 관점과 변화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진보적 가치체계(평화, 인권, 환경, 발전 등)의 재정립, 사회경제제도와 정책수단의 체계적 재구상이 필요함
- ☞ 전체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정상호의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진보·개혁 진영은 구체적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임
- 정상호(“ ‘새로운 중심’ 의 건설: 강령·리더십·정당의 창조적 전환”,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발표문)는 ‘폐기해야 할 노선과 정립해야 할 정책’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
 - 낡고 무능한 이미지를 주는 부정적 정책 패키지들: 삼불정책, 시민운동의 반정당적 인식과 탈정치적 노선의 폐기, 반생산력·반경쟁력·반성장주의, 반개방 담론과 민족경제론의 잔재, 무상의료·무상교육
 - 정립해야 할 정책과 전략들: 정당의 근본 개혁(핵심이슈 정당으로 재편), (지방권력의 민주화를 주도할 풀뿌리운동정치로서) 2010 프로젝트에 착수(횡적·공간적 접근), (이념적으로 중도 + 진보, 계층적으로 중산층에 기반을 둔) 한국형 이익정치의 모색(종적·계층적 접근)
- 진보·개혁 진영이 대중과 성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존중·애정이 모든 소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 프레임 이론(조지 레이코프)의 핵심은 ‘우리의 프레임이 맞다’고 우기는 데(자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의 과잉)에 있지 않음; 왜 우리의 프레임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함; 진정한 소통, 또는 설득과 지지 유도의 핵심은 가치, 인간적 유대, 진정성, 신뢰에 있음(소통 윤리가 소통의 성공을 가져다 줌)
- 대중들뿐만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조차도 ‘이중개념주의자’임을 자각하고, 대중들의 사회의식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함; 대중을 폄하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

□ 진보·개혁 진영은 현실 파악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1970-80년대와 비교하여 진보·개혁 진영은 상당 정도 엘리트주의적이고 중상층 지향적이며, 또한 중앙정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함;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대중의 현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문제임

※ 개인적으로도 대중의 현실을 발표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음

■ 2007년 대선을 좌우한 보수진영의 프레임

- 낡은 가치와 이념에 집착하고 정책적으로는 무능한 ‘좌파 정부’와 선진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가져다 줄 실용적이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보수’
- ‘구좌파’와 ‘신보수’라는 개념 대립; 그리고 좌파에게 ‘신진보로의 변신’을 요구; 심지어 ‘신보수’에 대응할 ‘신진보’가 없음을 우려함
- 무엇이 ‘신보수’이고, 무엇이 ‘선진화’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개념들은 모두 강력한 ‘프레이밍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

IV. 운동정치, 제도정치 그리고 싱크 탱크

□ 과연 진보·개혁 진영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은 가치의 전선이다.

- 근대사회의 진보적 프로젝트에서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의 ‘종합적’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참여와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협력체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가치들인 연대, 평등, 환경, 평화, 인권(양성 평등, 소수자 보호 등을 포함) 등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성과 사회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회의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진보·개혁 진영을 묶어내기란 쉽지 않음; 한국사회 성격논쟁, NL/PD 대

- 립 구도, 분단체제론 이후 한국 사회를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묶어내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으며,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는 있었지만 진보·개혁 진영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음
- 이 모호함은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강점이 되기도 함; 이미 한국 사회는 하나의 잣대로 이념 지평을 그리기는 불가능함
- 진보적 가치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 가치들을 동시에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정책도 존재할 수 없음; 가치체계의 재구성과 전망의 재구상에 기초하여 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임

□ 진보·개혁 진영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

- (쟁점 1)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인들은 진보적이기도 개혁적이기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유주의적’이었거나 ‘신자유주의적’이었음; 지난 10년 간 특히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었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는 없음; 발전국가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세계화 과정에 들어간 한국 경제의 경우, ‘자유주의적 요소’가 갖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부정할 수 없음
- (쟁점 2) 자유주의적 경향을 갖는 개혁 진영과 실질적인 진보 진영은 이번 기회에 분리되어야 하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온건 진보와 급진 진보 사이에는 정치적 분리가 일어나야 함; 실질적으로 이미 온건 진보(진보·개혁 정당)와 급진 진보(민주노동당) 사이에는 분리가 일어나 있음; 과연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정치 세력이나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의 진보와 관련하여 해야 할 역할이 끝났는지 의문임;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여 ‘건전한 자유주의’ 또는 ‘비관적 자유주의’ 세력은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민주적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집단임; 현실정치 차원에서는 진보·개혁 진영 속에 있는 보수적 정치인들의 분리와 진보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이 더 긴급하고 핵심적인 과제임; 넓은 의미의 진보·개혁 진영 내부 세력들 사이의 현실적인 협력, 혹은 좁은 의미의 진보·개혁 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의 협력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현실에서 전략의 차원에서나 성과의 차원에서나 반드시 필요함; 문제는 협력의 구도와 방식임

□ 진보·개혁 진영의 기반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 정치공학에 편향되지 않은 제도정치의 작동이 요구됨
- 운동정치는 제도정치의 사회적 기반임; 진보·개혁 진영의 물적, 인적, 이념적 자산은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나옴
-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정착이 필요함



- 싱크 탱크는 정책과 담론의 산실이며, 동시에 운동정치와 제도정치를 매개하고 진보·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이다.
 - 내부 비판과 갈등은 있으나 적대의식과 분열로부터는 자유로운 진보·개혁 진영은 불가능한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야 함

- 한국 사회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발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에만 사람이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 지난 5년 동안 진보·개혁 진영의 실패는 보수 진영에게 힘든 과제를 넘겨줌
 - 보수 진영의 성공이 한국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뒤에 '성공의 역설'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함
 - 과연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것인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걱정이 앞섬

■ 진보·개혁 진영의 SWOT 분석(이태수, “2007년 대선 평가: 진보세력,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7.12.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토론회 토론문)

		외부요인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점 ▷ 정권참여 통한 정책생산 능력 향상 ▷ 지난 10년 담론 축적에 따른 진보 기반 일정 구축 ▷ 위기감 따른 결집효과 발휘 가능성	약점 ▷ 취약한 담론 생산능력 및 담론 지배력 ▷ 진보세력의 분열 ▷ 진보세력의 정치화 한계
기회	▷ 국민의 견제 정서 ▷ MB정권의 취약점 표출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 실업률 증대, 대미종속, 부패, 반인권 등)	▶ 대안적 정책의 수립을 통해 대안세력으로서의 인정 ('준비된 세력')	▶ 진보담론의 강고화: 이념·이론·실용 측면에서 ▶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연대
위협	▷ 전 지구적 차원 신자유주의 팽배 ▷ '무능진보'에 대한 각인효과 지속 ▷ 30% 내외의 강고한 보수옹호계층 존재 ▷ 보수언론 위시, 보수층의 기득구조 활용을 통한 '진보 죽이기' 공세	▶ 진보매체의 역할 강화 ('선전전' 강화) ▶ 반신자유주의로의 지구적 차원 연대 강화	▶ 지식인운동-시민운동-기층운동의 연결을 통한 진보담론 유지 및 확대

(2008/01/09)

